

정부비축 석유제품 18일부터 방출

산자부, IEA 결정 18일 이내 풀어야 ... 국제 에너지 시장 위상제고

정부는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가운데 9월18일 이전에 비축유 방출을 실행할 계획이다.

오영호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은 9월5일 브리핑을 통해 “IEA 회원국들의 비축유 방출은 이사회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실행돼야 하며, 9월3일 비축유 방출이 결정됐기 때문에 18일 이전까지 비축유를 방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석유비축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국내 정유기업들과 9월5일 회의를 열어 비축유 방출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회의에서 비축유 방출방법, 방출 대상유종, 방출물량 상환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1990-91년 걸프전 때 IEA 회원국이 아니었으나 국내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약 500만배럴의 비축유를 정유기업들에 방출한 뒤 물량으로 상환받은 바 있다.

오영호 실장은 “한국에 배정된 비축유 방출규모가 크지 않아 비축유 방출로 인한 국내 석유 수급혼란 가능성이 거의 없고, IEA의 석유위기 공동 대응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제 에너지 사회에서 입지와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판단에 따라 IEA의 비축유 방출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IEA 비축유 공동방출 외에도 인접 에너지수입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산유국 등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에너지안보를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9월15일 열리는 IEA 이사회에서 석유비축, 수요관리 등에 대한 한국 입장을 개진하고 21-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석유포럼>에서 고유가 공동대응 및 민간기업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에너지·광업장관회의에서 에너지 수급안정 등 현안을 논의하고 11월25일 인디아에서 열리는 산유국-소비국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유가안정화, 석유공동개발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11월 서울에서 중동 산유국, 해외 석유 메이저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석유·가스 컨퍼런스>에서 석유·가스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5/09/06>